

# 조세재정 Brief

K I P F I S S U E P A P E R

##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

양은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/ eyang@kipf.re.kr

**01** 들어가는 글

**02** 현황 및 분석

**03** 정책제언

**04** 나가는 글

참고문헌

2023. 12. 27.

No.163



**kipf**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
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

요약

-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회, 국정감사,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  - 매년 일정 수준의 전기오류수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함
- 본고에서는 중앙부처 및 기금 결산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현행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였음
  - 인적 요인은 짧은 결산업무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남
  - 결산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결산지원제도 참여 경험 부족과 자산 관련 오류에 대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응답함
  - 사후적·통제적 제도인 결산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나 인센티브·페널티 제도가 미비하여 결과 환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-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책임관제도 활성화, 결산담당자의 회계전문성 강화, 기초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및 연계를 제안함

※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'양은주·윤영훈, 『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』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23(발간예정).' 중 일부 내용을 발췌·요약한 것임

## 01 들어가는 글

-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고 있음
  -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정보를 통해 경제적 실질에 기반을 둔 재정상태를 파악하고,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재무분석 정보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님
-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회, 국정감사,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,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
  - 매년 일정 수준의 전기오류수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함
  - 재무제표의 회계품질이 높을수록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(Feng et al., 2015),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
- 본 연구는 현행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여, 이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

## 02 현황 및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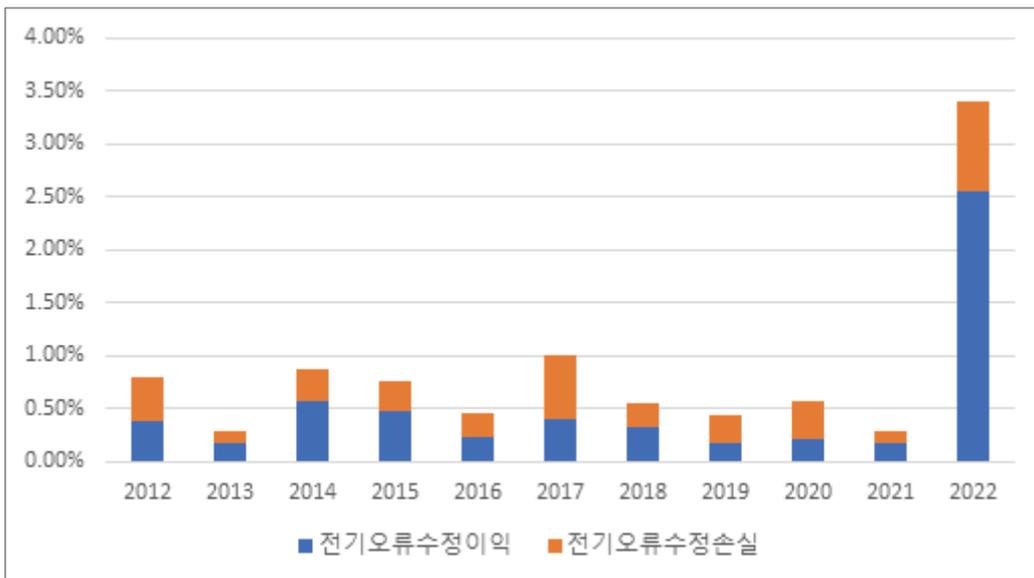
### 1. 국가재무제표 회계오류 현황

-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회계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함(기획재정부·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22)
  - 회계오류의 발생은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며, 이러한 오류의 사후적인 정정은 해당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음
- 국가재무제표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2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불규칙한 증감이 반복되면

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, 2022회계연도에 예외적으로 대규모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함

- 2021회계연도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후 10년 만에 국유재산을 전면 재평가하였는데, 이때 발생한 재평가오류정정금액과 대장 수정에 따른 전기 이전 자산재평가 손익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
  - 대대적인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오류정정금액으로, 추세분석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
-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, 자산재평가 효과, 국유재산 대장 누락,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, 건설중인자산, 선급금, 선수금 오류 등 자산 관련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

그림 1 연도별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 증감 추이

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」, 2012~2022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

## 2. 회계오류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

○ 국가결산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

- 설문 대상은 정부 중앙부처와 기금 및 특별회계의 결산담당자로 한정함
- 크게 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, 제도적 요인은 다시 사전적·예방적 제도와 사후적·통제적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
  - 설문조사 결과 및 오류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결산업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

○ 인적 요인은 짧은 결산업무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남

- 설문 대상의 대다수(81%)가 결산 관련 업무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며, 특히 결산 관련 업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결산담당자가 전체 설문 대상 중 절반 이상(52%)을 차지하고 있음
  - 정부부처 및 기관의 순환보직제도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며, 이는 경험 축적으로 인한 역량강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
- 업무 이해 수준은 평균적으로 보통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, 특히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회계전문인력(공인회계사, 세무사 및 회계전공자 등)이 전무한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
  - 특히 자산재평가는 감정평가사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,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닌 일선 결산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를 일임하는 상황으로 인해 오류가 다수 발생
- 순환보직제도로 인한 주기적인 결산담당자의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함
  - 결산업무의 인수인계 방식으로는 전임자로부터 직접적인 인수인계(67%)와 매뉴얼을 통한 인수인계(33%)로 구분할 수 있음

- 인수인계 방식에 따른 효과성 분석은 매뉴얼을 통한 인수인계보다 전임자를 통한 인수인계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이를 통해 결산업무에서 형식지(explicit knowledge)보다 전임자가 체득한 노하우와 같은 암묵지(implicit knowledge)에 대한 지식이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함

○ 제도적 요인 중 사전적·예방적 제도에 해당하는 결산지원제도의 미비점은 결산담당자의 참여 경험 부족과 자산 관련 오류에 대한 효과성 부족으로 나타남

- 정부에서는 결산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재무결산 중간 점검, 국가회계 전문교육, dBrain 시스템 개선,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서 발간 등 결산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, 네 가지 결산지원제도 모두 응답자의 참여 또는 활용 경험이 절반을 넘지 못함
- 결산지원제도의 효과성 관련 설문에서는 네 가지 결산지원제도 모두 전반적으로 결산오류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
- 오류유형별 효과성 관련 설문에서는 자산 관련 오류(국유재산대장 이중등재 및 누락, 국유재산대장 대장가액 오류, 물품대장 오류 등)의 감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
  -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의 경우 dBrain 시스템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세 결산지원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성이 나타났는데, 이는 최근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항목 위주로 dBrain 시스템 개선이 시행되어 자산재평가 오류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
  - 현황분석에서 자산 관련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과 일관된 결과로,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산지원제도가 자산 관련 오류의 감소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이로 인한 결과로 자산 관련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
  - 자산 관련 오류는 기초데이터의 오류 및 국가회계 실체 간의 정보공유 제한 등 결산담당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발생하여 결산지원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○ 사후적·통제적 제도에 해당하는 결산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나 인센티브·페널티 제도가 미비하여 오류 발

생 시 결과 환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

- 회계오류 발생 시 오류 발생 과정에 대한 피드백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대다수의 응답자(86%)가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
  -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(14%), 피드백의 형식으로는 당기 재무제표 수정조치, 유선설명 및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안내, 중간점검 시 확인 요청

등이 있다고 응답함

- 결산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는 거의 모든 응답자(96%)가 없다고 응답
  - 현행 결산체계에서는 회계오류 발생 시 결과 환류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고, 부처 및 기관 결산담당자의 회계오류 감소유인도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됨

그림 2 오류유형별 결산지원제도 효과성 설문 결과

재무결산 중간점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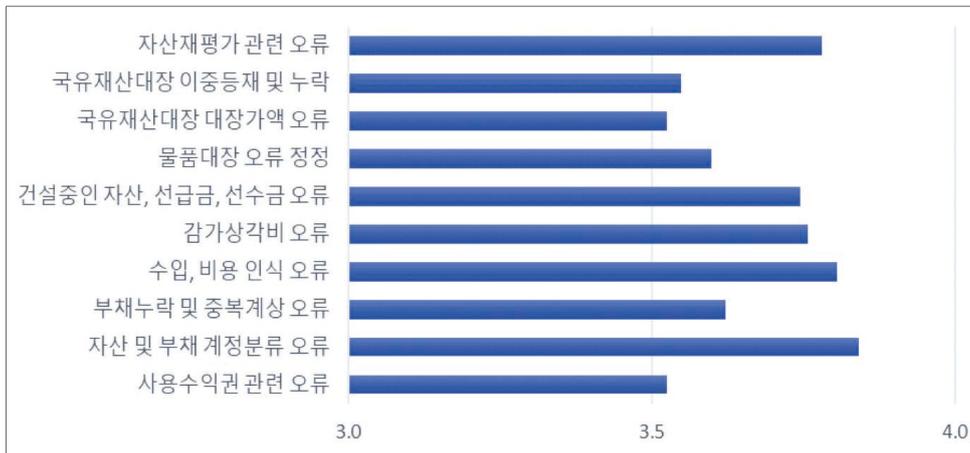
국가회계전문교육



그림 2 의 계속  
오류사례 해설서



dBrain 시스템 개선



주: “각 결산지원제도가 결산오류를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냐”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1-매우 그렇지 않다, 2-그렇지 않다, 3-보통이다, 4-그렇다, 5-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 점수  
자료: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

## 03 정책제언

### (제언1)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 책임관제도 활성화

- 감사원, 기획재정부 등 외부에서 관리·감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, 부처 차원에서 회계오류 발생을

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

-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조직 내부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말함. 이는 회계실체가 자체적으로 회계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의미

- 민간에서는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모범 기준을 마련

-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초데이터의 신뢰성 제고에서부터 결산담당자 교육까지 재무보고를 위한 모든 과정을 포괄

○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계책임관제도 내실화

- 「국가회계법」 제7조에서는 각 중앙관서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여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도록 규정
  - 회계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책임관의 위상 및 자격을 강화하고, 업무상 권한과 책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
- 회계책임관 중심의 회계결산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처 차원의 회계책임성 강화

## (제언2) 결산담당자의 회계전문성 강화

- 중앙부처 및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
  - 현행 순환보직제도하에서 결산담당 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은 축적되기 어려우므로, 회계관계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결산분야 내에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 마련
    - 행정안전부는 2016년 ‘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(3~5년)

동안 회계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, 경력평정 우대,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함께 개선(행정안전부, 2016)

○ 회계오류 발생 시 발생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환류 시스템 마련

- 이를 통해 유사한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고 결산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

## (제언3) 기초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및 연계

○ 국가자산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나, 장기적으로 기초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- 현재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 관련 오류는 기초데이터의 정확성 문제로 발생하여 결산체계 내에서의 개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
- 국유재산대장에 대한 실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정확성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,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

○ 국가회계실체 간의 정보제한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자료공유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마련 필요

- 특히 소유부처와 관리기관이 분리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반복적 회계오류를 분석하여 기관 간 자료연계 추진 필요

## 04 나가는 글

- 본 연구는 현행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미비점을 파악하고,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임
-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한 결과, 현행 국가회계시스템에서 회계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함
  - 인적 요인에서는 짧은 결산업무 기간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공무원 순환보직제도에 따른 결과로 해석
  - 제도적 요인 중 결산지원제도의 미비점은 결산담당자의 참여 경험 부족과 자산 관련 오류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
- 사후적·통제적 제도에서는 회계오류 발생 시 피드백을 받지 못한 응답자가 대다수이며, 결산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결과 환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- 회계오류 발생을 결산담당자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, 부처 차원에서 회계시스템 전반을 관리·감독할 필요가 있음
  -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책임감제도 활성화, 결산담당자의 회계전문성 강화, 기초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및 연계를 제안

### 참고문헌

- 기획재정부, 「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」, 2012~2022, 기획재정부 내부자료.
- 기획재정부·한국조세재정연구원, 『국가회계편람』, 2022.
- 양은주·윤영훈, 『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』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23(발간예정).
- 행정안전부, 「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된다 -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회계공무원 전문화 추진」, [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10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\\_MSTR\\_000000000008&nttlId=49504#none](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10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_MSTR_000000000008&nttlId=49504#none), 검색일자: 2023. 11. 1.
- Feng, M., C. Li, S. McVay, and H. Skaife, “Does ineffectiv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ffect a firm’s operations? Evidence from firms’ inventory management,” *The Accounting Review*, 90(2), 2015, pp. 529~557.